

“전주를 특례시 지정해야”

전주시의회, 촉구 건의안 채택 “실질적 행정수요 등 종합적으로 고려 재검토를”

전주시의회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9일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주 특례시 지정·육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단순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행정 수요와 재정 규모,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이라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지표만으로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는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또 “전주시가 주민등록상 인구는 66만명이지만 실질적인 인구 지표라 할 수 있는 생활인구는 100만명에 육박하고, 1000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로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광역시가 있는 권역에 비해

중앙 지원 규모가 반 수준에 그치는 등 차별을 받고 있어 낙후된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박병술 전주시의장은 “낙후되고 광역시 없는 전북의 발전과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는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지역 거점형 중추도시로 집중 육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북적이는 새벽시장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둔 29일 전주시 남부시장의 새벽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장을 보며 활기를 띠고 있다.

전주시민들의 노후생활 불안 해소되나

시, '커뮤니티 케어' 선도 유치

전주시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회 정책 의제인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유치에 나섰다.

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올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범사업의 노인분야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큰 축인 커뮤니티 케어는 자택이나 그룹홈 등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

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의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복지부는 올해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4개 분야의 8개 지자체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오는 2020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도래해 광범위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빠르게 인지하고, 오는 2020년 전국 시행에 앞서 실시되는 이번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전주시민의 노후생활 불안을 해소키로 했다.

특히, 시는 4개 공모분야 중 노인 커뮤니티케어 시범 모델을 준비중으로,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어르신 독립생활 및 낙상예방을 위한 주택 개조(집수리)사업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본격 제공 △병원 지역연계실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 지원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사람 중심의 서비스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다양한 30여 가지 세부 추진 사업을 수립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작년 국민 안전체감도 하락

KTX 강릉선 탈선·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등 원인

지난해 하반기 성폭력, 사이버 위협, 환경오염 분야에서 국민이 느끼는 안전체감도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감도가 가장 낮은 환경오염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해 국민 불안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전국 13세 이상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한 이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국민 1만2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와 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는 지난해 하반기 국민이 느끼는 사회 전반의 안전체감도는 5점 만점에 2.74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는 2.86점으로 0.12점이 하락했다.

지난해 안전체감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4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시기로 2.96까지 높아졌지만 이후 점점 하락세를 보였다.

하락의 원인은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KT통신구 화재, 12월 고양 운수관 파열, KTX 강릉선 탈선 등 잇달아 사고가 발생해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13개 재난안전 유형별 체감 안전도는 성폭력(2.33점), 사이버 위협(2.31점), 환경오염(2.30점) 세 분야가 지난해 상·하반기 모두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안전 체감도가 제일 낮은 환경오염 분야는 미세먼지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는 개행안부 측 분석이다.

반면, 원전사고(3.01점), 신종 감염병(2.96점), 안보위협(2.94점) 분야는 지속적으로 체감 안전도가 높아졌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하반기 연이은 사회기반시설 사고로 인해 사회 전반의 국민안전 체감도가 다소 하락했다”며 “국민이 안전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달부터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강석훈 기자

순찰차-승용차 정면 충돌 박권서 경위 끝내 숨져

현장으로 출동하던 순찰차가 중앙선을 넘어온 승용차와 정면충돌해 타고 있던 박권서(58) 경위가 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1시 45분경 익산시 여산면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순찰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크루즈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순찰차는 이 충격으로 도로 옆 배수로에 빠져 크게 파손됐다. 이 사고로 순찰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박 경위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순찰차 운전석에 있던 국모 경위(54), 승용차 운전자 손모씨(26)도 크게 다쳐 현재 치료 받고 있다.

사고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순차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급하게 속도를 내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음주 측정 결과 단속 수치(0.05%)에 못 미치지만 순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05%였다.

당시 박 경위 등은 “운전 중 크루즈 차량 운전석 시비가 붙었다”는 아우디 운전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순차는 이 운전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에 사고 충격으로 지워진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하고 사고 기록 장치(Event Data Recorder)를 분석을 의뢰중이며, 순차의 과실이 명백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민감동 경찰청장은 지난 26일 익산시 원광대병원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았다. 민 청장은 순직한 박 경위에 대해 1계급 특진을 추서하고 공로장을 헌정했다.

민 청장은 유족들에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돼 죄송한 마음뿐이다”며 “앞으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공식 SNS 계정에 “항상 책임감을 갖고 근무해 당신을 기억하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조문을 마친 민 청장은 박 경위와 함께 사고를 당해 같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국 경위의 병실도 찾았다.

/강석훈 기자

범죄 징후 예측시스템 내달 도입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전에 범죄 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이상 징후를 분석하는 '범죄 징후 예측 시스템'을 내달부터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성범죄자가 동일 수법을 반복한다는 데 착안해 개발해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보호관찰관에게 신호를 보낸다.

시스템은 성범죄자의 과거 범죄수법, 이동경로, 정서상태, 생활환경 변화 등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위험수준과 내용을 보내 재범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이울러 전국 570만개 구역을 유충시설과 숙박, 학교 등 14개 속성으로 나눠 대상자가 위치한 지역의 주변 특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전자발찌 착용 상태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범죄 예방기능도 갖추게 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지금보다 훨씬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해 전자발찌의 소형화와 신개념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 여성안심 사회주택 '청춘 101' 입주자 모집

전주시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전주형 여성안심 사회주택 '청춘 101'에 입주할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는 오는 2월 8일까지 중화산동에 위치한 여성안심 사회주택 '청춘 101'에 입주할 여성 청년·대학생 입주자를 공개 모집한다.

'청춘 101'은 기숙형 여성 안심주택

다가구주택으로, 시는 총 15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임대료 20만원 정도에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인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 여성 중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기준 70%(350만1813원) 이하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복학예정자면 신청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파지 훔친 60대 붙잡혀

군산경찰서는 29일 공업사 입구에 보관하던 파지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67)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 30분경 군산시 B로 한 공업사 입구에 보관하던 시가 5만원 상당의 파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